

시장에서 광장으로: 동아시아의 발전주의적 경쟁을 넘어서*

박 사 명**

I. 서론

“평화, 번영, 진보”를 지향하는 동아시아공동체(EAC, East Asian Community)는 ‘상상’인가 ‘망상’인가? 동아시아에 있어서 식민체제의 와해에 따라 전개되는 ‘상상적 민족공동체’의 경험과는 대조적으로, 냉전체제의 해체에 따라 부상하는 ‘상상적 지역공동체’의 전망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망상’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그러한 부정적 시각에 의하면 역내의 성장격차와 역외의 상호의존이 공동체적 경제통합에 대한 심각한 장애이며, 역내의 패권경쟁과 역외의 안보동맹이 공동체적 안보협력에 대한 강력한 제약이다(Lincoln 2004; Jones et al. 2006, 2007). 그러나 동아시아의 지역주의를 제동하는 소극적 요인들은 바로 동아시아의 지역주의를 추동하는 적극적 유인들이기도 하다. 다분히 유동적이고 단속적인 동북아 지역주의의 만성적 ‘발육부진’과는 대조적으로(Rozman 2004), 동남아 지역주의의 확장으로서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다양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역동적이며 지속적이다.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5년도 연구비(KRF-2005-079-BS0031) 지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다. 이 논문의 초고에 관한 세 심사위원의 매우 유익한 논평에 감사한다.
**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smpark@kangwon.ac.kr

그 점에 있어서 동북아 지역주의가 객관적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는 병리적 ‘망상’에 가까운 것이라면,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객관적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는 합리적 ‘상상’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의 지역주의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있어서 ‘망상’은 “강력한 반대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고수되는 도착된 신념”으로서, “현실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거나 보다 상호주관적인 관념에 부합하지 않고, 공상적이며 반증할 수 없는” 심리적 현상으로 규정된다(Jones et al. 2006: 4-6). 국가중심의 권력정치, 세력균형, 대국공조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현실주의(Realism) 시각의 대국주의를 넘어서 지역차원의 상호의존, 공유규범, 공동안보 등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자유주의(Liberalism) 시각의 다자주의가 흥미하고 있다. 그러나 다자주의적 경제협력 및 안보협력을 위한 공동체적 연대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설파하는 자유주의의 정치적 수사는 국가중심적 일방주의 및 양자주의가 철저하게 관철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객관적 현실을 은폐하는 ‘망상’일 뿐이라는 것이다(Jones et al. 2006: 144-69, 2007).¹⁾

그러한 시각은 이론적 현실주의를 객관적·물리적 현실과 등치함으로써 이론적 자유주의를 주관적·심리적 ‘망상’으로 격하한다. 유럽의 경우 1970년대 전반 유가폭등의 ‘난국(turbulence)’에 직면하여 각국이 공동대응이 아니라 ‘각개약진’에 회귀한다. 그와 같이 대내적 지역통합의 정치적 수사를 압도하는 대외적 상호의존의 경제적 현실에 직면함에 따라 지역통합에 관한 이론적 모색은 ‘상상’이 아니라 ‘망상’이었음을 자인하기에 이른다(Haas 1976). 그러나 경제공동체에서 정치연합까지 유럽통합의 지속적 진전은 그러한 ‘난국’이 일시적 위기의 국면에 불과했음을 입증한다(Wiener and Diez 2004).

1) 사실 유럽통합의 전개과정에서도 연방주의와 공동이익을 예찬하는 지역주의적 수사가 국가주권과 국가이익에 집착하는 국가주의적 현실을 은폐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상당히 타당하다(Moravcsik 1998; Moeller 2006).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경제위기는 그와 유사한 ‘난국’의 재현으로서, 위기에 대한 대응에서 드러나는 각국의 ‘각개약진’은 동남아와 동아시아의 지역주의에 대한 심각한 비판의 확산과 동시에 새로운 기대의 상승을 초래한다. 요컨대 ‘상상’과 ‘망상’의 객관적 기준은 상당히 유동적이며, 상황에 따라 지극히 가변적인 것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주의에 관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비전과 동아시아 ‘ASEAN+3(한국, 중국, 일본)’의 비전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역동적으로 형성된다. 1967년 이후 동남아의 제한적 지역협력에 대한 경험은 1997년 이후 포괄적 지역통합을 위한 ‘비전 2020’(ASEAN Vision 2020)으로 발전한다(ASEAN 1997, 2000). 2003년에는 정치안보, 경제금융, 사회문화 등 세 축으로 구성되는 ASEAN공동체의 본격적 기획이 제출되고(ASEAN 2003), 2006년 ASEAN현장에 관한 현인그룹(EPG, Eminent Persons Group) 보고서를 통해 정치통합-‘ASEAN연합(Union)’-의 파격적 의제까지 설정된다(ASEAN 2006; 배공찬 2007). ‘ASEAN+3’(APT)의 ‘반사적’ 또는 ‘모방적’ 지역주의(Beeson 2003; Jones et al. 2006: 3)는 1996년의 아시아-유럽회의(ASEM, Asia-Europe Meeting)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1995년 ASEAN과 동북아(한국, 중국, 일본)의 역사적 회동에서 기원한다.

그러한 외생적 계기가 1997년 경제위기라는 내생적 계기와 결합하면서 동남아의 지역주의가 동아시아의 지역주의로 확대됨에 따라 1999년 동아시아협력선언 및 2001년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이 제출된다(ASEAN 1999, 2001). 이 연구는 발전주의적 경쟁을 넘어 공동체적 연대를 추구하는 동남아 및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규범적 비전을 분석한다. 진정한 평화 즉 ‘정치적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인간안보(human security)와 진정한 번영 즉 ‘경제적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이 진정한 진보 즉 ‘인간적 진보(human progress)’를 담보한다는 ASEAN공동체의 이상과 “평화, 번영, 진보”를 지향하는 동아시아공동체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이다(UNDP 1990: 9-16, 1994: 24-33; ASEAN 1997, 2000, 2003; EAVG 2001; CHS 2003: 7-13). 그러므로 이 연구는 ASEAN공동체의 비전이 동아시아공동체의 구상에 반영되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그것이 파괴적 ‘망상’이 아니라 창조적 ‘상상’의 범주에 속함을 강조할 것이다.

II. 공동체: 동남아와 동아시아

민족주의에 비판적인 시각에 있어서 민족주의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발견’이 아니라 아직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에 대한 ‘발명’이다. 그러나 앤더슨(Bebedict Anderson)에 의하면, 그것은 어떤 ‘진정한’ 공동체의 실재를 가정함으로써 ‘발명’을 ‘상상’과 ‘창조’가 아니라 ‘공상’과 ‘날조’로 규정하는 본질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사실 대면접촉이 가능한 기층 촌락 수준의 공동체보다 규모가 더 큰 모든 공동체는 상상의 결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동체는 그 진정성 또는 허구성이 아니라 상상의 양식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 민족은 그에 내재하는 불평등과 착취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심층적이고 수평적인 동족의식의 현실성에 대한 인식 때문에 공동체로서 상상되는 것이다(Anderson 1991: 6-7). 그리고 그와 같은 현상은 민족을 넘어서는 지역에 대한 상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어떠한 공동체적 비전이 그 규범적 타당성과 현실적 가능성에 있어서 객관적 조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기만적 ‘망상’의 범주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객관적 조건에 일정하게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창조적 ‘상상’의 범주에 속할 것이다. 예

컨대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에 관한 구상에 있어서 세계화의 객관적 현실을 외면하고 지역적 차원의 자급적 수입대체 및 자족적 분업구조를 추구하는 폐쇄적 지역주의는 거의 ‘망상’에 가까운 것이다(Bello 2002). 다른 한편 동아시아의 안보협력에 관한 구상에 있어서 대국주의적 세력균형의 현실을 외면하고 다자주의적 집단안보의 이상만 추구하는 폐쇄적 지역주의도 또한 거의 ‘망상’에 가까운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세계화와 지역화의 현실을 역동적으로 수용하고, 정치적으로 세력균형과 협력안보의 요구를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동아시아공동체의 개방적 지역주의는 충분히 창조적 ‘상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의 경우 전통적 외교관계, 국가연합(confederation), 연방국가(federalism) 등 지역협력과 지역통합의 다양한 수준을 둘러싼 이론적 논쟁과 정치적 경쟁에서 국가연합과 연방국가 사이 중간적 수준으로서 공동체(community)라는 형태의 지역연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연방국가-‘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수준의 지역통합을 지향한다는 구상이 승리함에 따라 공동체의 개념적 내포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당초부터 분명하게 전제되고 있었다(Parsons 2002). 그와는 대조적으로 동남아의 경우, 식민체제의 와해와 더불어 국가주권에 대한 민족주의적 열망이 고조되는 1967년에 출범한 ASEAN이 1997년 이후 단계적으로 제출하는 경제금융, 정치안보, 사회문화 등을 포괄하는 공동체라는 목표는 그 개념적 내포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미비한 상당히 모호한 구상으로서 국가주권에 대한 존중은 그 당연한 전제로서 수용된다. 그와 같이 편의적이고 모방적인 발상은 동아시아공동체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음이 분명하다(Han 2001).

사실 지역적 차원의 공동체는 낮은 수준의 지역협력과 높은 수준의 지역통합 사이 광범한 스펙트럼에서 다양한 수준의 개념화가 가능한 상당히 유동적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지역협력은 현재의 경

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 자유무역협정이 추가된 수준이고, 지역통합은 현재의 EU에 공동안보기제가 추가된 수준으로 이해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지역적 동질성이 높은 유럽에 비하여 지역적 이질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동남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경우 공동체의 개념적 내포가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컨대 국민국가 수준의 ‘일원적(amalgamated) 공동체’와 지역통합 수준의 ‘다원적(pluralistic) 공동체’가 구분되는 경우(Adler et al. 1998), 후자는 다시 유럽형 ‘경성(thick) 공동체’와 동남아형 ‘연성(soft) 공동체’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Emmerson 2005). 동아시아공동체에 관한 말레이시아의 구상으로 제시되는 ‘ASEAN+, EU-’도 그러한 사례의 하나이다. 동아시아공동체는 그 통합적 구심력이 현재의 ASEAN 보다는 강화되는 반면 현재의 EU보다는 약화되는 수준에서 적절하게 조정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라는 것이다.

공동체는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할 만큼 충분히 ‘넓은’ 지역이어야 하지만, ‘깊은’ 협력이 어려울 만큼 너무 넓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익사회(*Gesellschaft*, association)를 넘어선 공동사회(*Gemeinschaft*, community)로서 일시적 이해관계에 따른 전략적 동맹이 아니라, 단기적 이해관계 외에도 근본적 정체의식과 가치지향을 공유하는 일종의 항구적 문화공동체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이 전자라면 동아시아공동체는 후자이다. 그러나 동아시아공동체가 EU를 학습할 필요는 있지만 모방할 필요까지는 없다(Noordijn 2004).

최근 ASEAN현장에 관한 EPG 보고서는 “ASEAN공동체 및 궁극적 ASEAN연합(ASEAN Union)의 실현을 위한 결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ASEAN공동체에 있어서 정치안보, 경제금융, 사회문화 등 부문별 공동체의 구축 및 부문간 유기적 조정을 강조한다. “ASEAN공동체는

장기적으로 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긴밀한 상호연계 및 상승효과를 추구하는 세 축으로 구성되며,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법치주의와 지역통합에 의해 보호되고 인간안보가 확보되는 ‘ASEAN연합’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ASEAN 2006). 그러한 정치연합을 통해서만 역내 모든 인간의 잠재능력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조건으로서 항구적 평화, 공정한 번영, 인간의 존엄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EPG의 필리핀대표 라모스(Fidel V. Ramos)에 의하면 ‘ASEAN연합’은 미국의 연방제도나 유럽의 정치연합을 모방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단순한 공동체 이상의 일정한 ‘정치통합’을 요구하며, “1967년 ASEAN 창립 이후 40년 동안의 대화 및 협의 수준을 넘어서 현재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수준의 헌장·규칙에 대한 구속력이 필요하다”(Ramos 2006: 5-6).

사실 ASEAN의 공동체적 비전은 단계적으로 발전하고 역동적으로 형성된다. 1997년의 ‘비전 2020’은 정치안보 부문에서는 “지역공조(a concert of nations)”를 비전으로 제시하지만, 지역협력의 수준이 가장 높은 경제금융 부문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자본의 자유이동, 공정한 경제발전, 빈곤 및 사회경제적 격차의 축소를 위한 공정하고 개방적인 “경제권(economic region)”을 비전으로 설정함으로써 자유무역지대, 투자자유지역, 거시경제·금융정책의 긴밀한 공동협의 등을 추구한다. 사회문화 부문에서는 식량, 건강, 환경, 자원, 빈곤, 마약, 여성, 국제범죄 등에 대처하여 인간안보와 인간개발을 추구하는 “상부상조하는 사회들의 공동체(a community of caring and sharing societies)”가 지역협력의 목표로서 제출된다(ASEAN 1997, 2003). 그러한 구상은 ASEAN이 경제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에 실패한 직후 2000년 EPG 보고서의 “민중중심적 ASEAN”을 통해 구체화되는바, 포괄적 ASEAN공동체라는 의제가 처음으로 설정되고 그 궁극적 목표가 인간안보 및 인간개발로 집약되는 것이다(ASEAN 2000: 5-7).

2003년 제2차 발리협약(Bali Concord II)은 정치안보, 경제금융, 사회문화 등 세 부문별 공동체에 기초하는 포괄적 ASEAN공동체에 관한 계획을 공식적으로 수용한다(ASEAN 2003). 그러나 ASEAN공동체는 현실적으로 “역내 각국이 그 국내적 맥락에서 ASEAN에 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경우에만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ASEAN 헌장(Charter)에 관한 EPG 보고서는 주권존중 및 내정불간섭 원칙에 대한 각국의 지나친 집착을 우려하고, “공동이익을 위하여 보다 긴밀한 협력이 요청되는 분야에서는 ASEAN의 전통적 내정불간섭 원칙이 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즉 “긴급한 위기에 대응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감성이 낮은 문제에 대처하는 경우에도 보다 효과적인 정책결정이 필요한 것이다”(ASEAN 2006: 13).

그와 같은 ASEAN공동체 구상의 형성과정에서 동남아를 넘어 동북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의 광역적 지역협력이 긴요하다는 시각이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급속하게 확산된다. 동남아와 동북아의 상호관계는 대단히 중요하며, 그것은 ASEAN이 추구하는 비전의 조속한 실현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ASEAN 2000). 2001년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East Asia Vision Group) 보고서는 공동체의 건설을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장기적 목표로 설정하고,²⁾ 단순한 “국가들의 집합”에서 “평화, 번영, 진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진정한 지역공동체로의 전환”을 촉구한다(EAVG 2001). 동아시아의 그러한

2) 당시 EAVG의 의장을 맡았던 한승주(Han 2001: 3-4) 한국대표에 의하면, 첫째, 동아시아 지역기구의 명칭에 관한 논의에서 ASEAN 각국은 ASEAN이 ‘association’에 불과한 현실에서 ASEAN 자체의 연대가 약화될 우려 때문에 동아시아 차원의 ‘community’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한편 ‘organization’, ‘society’, ‘union’ 등을 제안했으나, 결국 소문자로 표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국대표가 제안한 ‘community’가 채택된다. 둘째, EAVG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범위에 관한 논의에서 경제협력 이외에도 다양한 부문의 포괄적 협력에 동의하고, 포괄적 공동체의 구축과정에 대한 경제부문의 ‘촉매’, ‘동력’, ‘엔진’ 등과 같은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기로 합의한다.

공동체는 “정치적 경쟁, 역사적 적대, 문화적 차이, 이념적 대립, 경제적 격차”의 과거를 넘어서 상호신뢰와 상호존중에 기초하는 안정과 협력의 안보환경을 통한 “지역의 평화,” 무역, 투자, 금융의 협력, 사회·경제의 발전, 교육의 향상, 기술의 진흥을 통한 “공동의 번영,” 그리고 기본권의 신장과 삶의 질에 대한 개선을 통한 “인간적 진보”를 지향한다. 다른 한편 동아시아공동체는 세계에 대하여 외향적이고 개방적이며 유기적인 상호의존을 추구할 것이다(EAVG 2001).

그와 같은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지도적 원칙은 ASEAN공동체의 기본적 원칙을 다각적으로 반영하는바, 정체의식의 함양, 경제주도적 전략, 민중중심적 정책, 시민사회의 참여, 국제규범의 준수, 국가주권의 존중, 점진주의적 접근, 대외개방적 시각 등이 강조된다(ASEAN 2001). 최근에는 ASEAN공동체의 경제금융, 정치안보, 사회문화 등 세 부문별 공동체에 관한 기획이 동아시아공동체의 경우에도 적절하게 수용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확산된다(이승철 외 2005; 龐中英 2004; CEAC 2005; NEAT 2006). ASEAN이 그 ‘비전 2020’을 통해 국가중심적이 아닌 민중중심적 접근으로서 부각하고 있는 인간안보와 인간개발이라는 ASEAN공동체의 장기적 목표도 동아시아공동체의 구상에 충실하게 반영되기에 이른다(EAVG 2001; EASG 2002). 그러나 그와 같이 다각적이고 중층적이며 포괄적인 지역협력의 동향 때문에 오히려 경제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기조가 희석될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한 주의가 환기되기도 한다(ASEAN 2007).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동남아는 적자생존의 시장경쟁을 통한 가속적 성장을 넘어서 세계화의 도정에 잠재하는 각종 위기적 국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호의존의 지역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한다(ASEAN 2003; 박사명 2006: 137-44). 전자가 발전주의적 경쟁을 추구하는 반면, 후자는 공동체적 연대를 요구한다. 그

와 같은 지속적 발전은 경제금융, 정치안보, 사회문화 등 포괄적 지역협력을 요구하는바, 지역안보의 필요조건으로서 주권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전통적 국가안보를 넘어 인권에 대한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간안보가 필요하다. 경제금융, 정치안보, 사회문화 등 포괄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동남아 지역주의의 진전은 그러한 객관적 요구에 대한 매우 적절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그러한 동남아의 전략적 전환은 “평화, 번영, 진보”를 추구하는 동아시아공동체의 구상에도 충실하게 반영되고 있는바, 동아시아의 지속적 발전은 소극적 인간안보와 아울러 적극적 인간개발을 요청한다는 것이다(EAVG 2001; EASG 2002).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역적 정체의식 및 통합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유럽과는 대조적으로 동아시아의 경우 아직 지극히 낮은 수준의 지역적 정체의식 및 통합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해양적 정체성에 입각하여 동아시아의 경제적 중심을 자임하는 일본, 대륙적 정체성에 기초하여 동아시아의 문화적 중심을 자부하는 중국, 동북아 중심론을 표방하며 동아시아의 균형적 협력을 모색하는 한국, 다원적 중심론을 지향하며 동아시아의 지역적 연대를 강조하는 동남아 등 동아시아 각국의 지역적 정체의식에서는 여전히 심층적 의식분열이 심각한 실정이다(동북아시아위원회 2006; 郭樹勇 2006). 따라서 동아시아의 현실적 조건에 있어서 지역적 정체의식은 지역주의의 독립변수보다는 오히려 종속변수에 가까운 것이다. 경제통합이 이미 유럽에 비견되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동아시아에 있어서 ‘광장’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시장’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보완하는 경우에만 동아시아의 정체의식이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동아시아 각국이 발전주의적 경쟁을 넘어서 공동체적 연대를 모색해야 하는 지역적 맥락인 것이다.

Ⅲ. 경제금융부문: '시장'의 번영

유럽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지역주의에는 통합수준이 가장 낮은 호혜무역(preferential trade area)에서 자유무역(free trade area),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경제연합(economic union)을 거쳐 통합수준이 가장 높은 정치연합(political union)까지 다양한 수준의 동심원적 통합유형이 존재한다(Low 2000; 陸建人 2006). 호혜무역지대는 회원국에 대한 부분적 호혜관세가 제공되고, 자유무역지대는 회원국에 대한 모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며, 관세동맹은 자유무역에 비회원국에 대한 공동관세가 추가되고, 공동시장은 관세동맹에 노동과 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이 추가되며, 경제연합은 공동시장에 재정 및 통화에 관한 공동정책이 추가되며, 정치연합은 경제연합에 외교 및 국방에 관한 공동정책이 추가되는 가장 높은 수준의 통합유형이다.

지역통합의 가장 높은 단계인 정치연합에 진입하고 있는 유럽과 대조적으로 동남아는 가장 낮은 단계인 호혜무역 및 자유무역에 접근하고 있으며, 공동시장 및 경제연합을 장기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는 유럽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역내 교역집중도 및 성장격차에도 불구하고(이창재 2005: 123-28; Diehl 2006: 44), 아직 호혜무역 또는 자유무역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단계로서, 개별적으로 체결되는 양자주의적 자유무역협정이 집합적으로 다자주의적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는 이른바 '스파게티접시'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정도이다. 동아시아의 그와 같은 경제통합 과정에서 ASEAN의 주도적 역할이 강조되는바, 그 점은 특히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더욱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다.

ASEAN은 1997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협력에 있어서 경제적 효율성을 위한 상품, 서비스, 투자, 자본의 자유이동과 동시에

사회적 형평성을 위한 빈곤과 사회경제적 격차의 해소를 추구한다. 무역 및 투자의 단일시장이 추구되는 한편, 국민통합과 지역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대내적으로 공정하고 대외적으로 개방적인 ‘경제권’ 개념이 상정된다(ASEAN 1997). 2000년에 이르면 ASEAN공동체 개념이 부상하며, 그 주도적 동력으로서 역동적 경제성장을 위한 상품 및 자본의 자유이동 즉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가 강조된다(ASEAN 2000: 15). 2003년 제2차 발리협약은 경제공동체가 ‘비전 2020’의 목표인 경제통합의 실현임을 선언한다. 한편으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자본의 자유이동과 다른 한편으로는 공정한 경제발전과 빈곤 및 사회경제적 격차의 축소가 단일시장 및 단일생산기지로써 경제공동체의 필요조건임이 강조된다(ASEAN 2003). ASEAN은 2004년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상품, 서비스, 숙련노동의 자유이동과 빈곤 및 사회경제적 격차의 축소를 통한 단일시장 및 단일생산기지의 창출을 거듭하여 확인하고 있다(ASEAN 2004: 9).

2006년 ASEAN의 EPG 보고서는 ASEAN의 경제공동체, 단일시장, 경제의 지역연계 강화, 개발격차의 축소 등을 위한 지역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제정책의 공동조정과 더불어 상품, 정보, 숙련기술의 자유이동을 위한 단일시장의 창출을 역설한다(ASEAN 2006: 2-3, 16). 경제공동체는 ASEAN공동체의 세 축 가운데 가장 진전된 축으로서 지역통합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93년 ASEAN의 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협정에 따르면, 선발 6국(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은 2003년, 후발 4국 가운데 베트남은 2007년, 라오스와 미얀마는 2008년, 캄보디아는 2010년까지 모든 관세가 5% 이하로 인하된다. 선발 6국은 2006년, 후발 4국은 2015년까지 모든 관세가 폐지된다. 파편화된 시장, 높은 거래비용, 예측가능성이 낮은 정책환경 등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는 다양한 제약을 극복하고 외국자본의 직접투자 및 수출시

장의 점유율 제고에 필요한 ASEAN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속적 시장통합이 필수적이다. 한편 역내 개발격차의 해소를 위한 ASEAN 통합구상의 효과적 실현이 강조된다(ASEAN 2006: 11-12).

이와 같은 ASEAN의 진전에 대응하여 1999년 ‘ASEAN+3’의 1999년 동아시아협력선언은 구조개혁의 심화와 지역협력의 강화가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대안임을 강조한다. 특히 금융, 통화, 재정부문에 대한 정책적 대화, 조정, 공조의 강화, 각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역내 자본이동의 감시, 각국 금융제도의 강화, 국제금융체제의 개혁, 역내 지원체제의 제고 등이 촉구된다(ASEAN 1999). 2001년의 EAVG 보고서는 무역개방, 투자개방, 개발협력, 기술협력, 정보화 등을 통한 동아시아경제공동체의 점진적 건설을 촉구한다.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는 동아시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중심적 동력으로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와 연계된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와 아울러 ASEAN투자지역을 확대한 동아시아투자지역의 창설이 제안된다. 동아시아의 지속적 성장에 필수적인 개발격차의 축소를 위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후발국가의 기초시설, 정보기술, 인간자본 등에 대한 우선적 지원이 요청된다. 각국 금융제도의 정비,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연계된 동아시아통화기금 등 지역금융체제의 구축, 금융협력을 위한 치앙마이구상(Chiangmai Initiative)의 효과적 실행 등이 강조된다(EAVG 2001).

동아시아의 경제적 지역주의는 다양한 협력구상이 제출되는 제1단계(1985-92), 아시아-태평양 차원의 경제협력(APEC)이 부각되는 제2단계(1993-98), 동아시아 차원의 새로운 협력구상이 시도되는 제3단계(1998-2000), 다양한 자유무역협정이 경쟁하는 제4단계(2000-현재) 등 대체로 네 단계를 통해 전개된다(Munakata 2006: 170-78).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 East Asia Free Trade Area)는 동남아와 동북아

(한국, 중국, 일본)를 포괄하는 동아시아경제공동체의 중심적 기반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동북아의 독자적 자유무역협정은 여전히 부진한 상태인 반면, ASEAN과 동북아 각국 사이의 개별적 자유무역협정은 상당한 진전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공동체의 경제금융부문에 대한 구상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도적 역량인 ASEAN 경제공동체의 비전인바, 그 핵심적 관건은 동아시아의 가속적 경제성장과 파국적 경제위기의 접점에 위치하는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와 그 신중상주의적 민족주의의 행방이다 (Woo-Cumings 1999; Beeson 2007: 141-83).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을 주도한 ‘발전국가’의 발전주의적 경쟁은 그 가속적 성장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냉전종식에 따른 세계화와 지역화의 새로운 국제환경에 직면하여 지속적 발전에 대한 한계를 드러낸다. 그 점에 있어서 ASEAN공동체의 비전과 동아시아공동체의 비전은 모두 발전주의적 경쟁에 대한 성찰적 대안을 모색한다. 종전의 일본중심적 ‘기러기형’의 수직적 분업구조든 최근의 중국중심적 ‘대나무형’의 수평적 분업구조든,³⁾ 가속적으로 확대되고 심화되는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은 냉전시대의 민족주의 및 국가주의에 기초한 발전주의적 경쟁의 한계를 강력하게 시사한다(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2006: 108-10; Roland-Holst 2003; Yun 2005). 따라서 동남아와 동아시아의 지역주의는 모두 경제통합을 ASEAN공동체와 동아시아공동체의 ‘촉매’, ‘동력’, ‘엔진’ 등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ASEAN공동체의 동심원적 확장으로서 동아

3) ‘기러기형’의 수직적 분업구조에서는 개발격차 및 제품주기(product cycle)에 따라 노동집약산업, 자본집약산업, 기술집약산업 등이 역내 각국에 단계적으로 이전되는 경제통합에 대한 일본자본의 주도적 역할이 부각되는 반면, ‘대나무형’의 수평적 분업구조에서는 기술집약산업의 표준화와 단순화로 인하여 개발격차 및 제품주기와 무관하게 일본, 미국, 유럽 등 다양한 외국자본의 경쟁적 직접투자에 따라 역내 각국에 거의 동시적으로 확산되는 경제통합에 대한 중국시장의 중심적 역할이 부각된다(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2006: 108-10; Yun 2005).

시아공동체를 기획하고, 발전주의적 경쟁을 넘어서 경제금융, 정치안보, 사회문화 등을 포괄하는 전면적 지역협력을 통하여 공동체적 연대를 모색하게 되는 구조적 조건인 것이다.

IV. 정치안보부문: '전장'의 평화

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발전주의적 경쟁을 넘어 경제금융부문은 물론 정치안보부문 및 사회문화부문에서의 공동체적 연대를 요구한다. ASEAN은 그 공동체 구상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협력과 정치연대를 통하여 구축되는 상호이익의 강력한 토대에 기반하는 정치환경의 확보를 요구한다"고 선언하고 있다(ASEAN 2003). 제국주의 식민지배의 구조적 유산을 타파하기 위한 국가형성과 국민통합의 과제가 상존하는 동남아에서 ASEAN의 내정불간섭 및 만장일치 원칙에서 드러나는 국가주권에 대한 민감성은 동북아 각국의 경우 훨씬 더 고조될 가능성이 다분하다(Severino 2006: 85-160; Wang 2006).⁴⁾ 중국과 일본의 역사적 적대관계와 현실적 경쟁관계로 인하여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에 있어서 EU의 경우와 같은 외교·국방에 관한 공동정책은 현실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망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안보협력은 유럽과는 상당히 다른 접근을 요구한다. 유럽의 경우 이미 대국주의적 세력균형을 넘어서 다자주의적 집단안보가 제도화되고 있는 반면,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안정적 세력균형에 대한 전망조차 지극히 불확실한 실정인 것이다(Ruggie 1993: 4; Friedberg 1998).

4) 유럽공동체(EC)의 경우에도 만장일치 원칙이 장기적으로 견지되며, '조건부 다수결 원칙'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되는 것은 1986년 '단일유럽법'(The Single European Act)에 이르러서이다(Moravcsik 1998: 315).

‘전장에서 시장으로’의 전환이 정치이념적 적대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발전주의적 경쟁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면, ‘시장에서 광장으로’의 이행은 발전주의적 경쟁을 넘어서는 공동체적 연대의 추구를 의미한다. 국제관계의 무정부상태에서도 일방주의적 적대, 양자주의적 경쟁, 다자주의적 연대 등 다양한 전략문화의 사회화가 충분히 가능하다(Wendt 1999: 246-312). 유럽이 이미 적대와 경쟁을 넘어 연대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반면, 동아시아는 아직 적대에서 경쟁의 단계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주의의 비관적 시각에 따르면, 21세기의 동아시아는 갈등과 경쟁의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동아시아의 역사적, 지리적, 정치적, 제도적 조건을 고려할 경우, 그 미래의 지역질서는 동아시아의 과거 즉 평화적 중국패권보다는 유럽의 과거 즉 갈등적 세력균형의 가능성이 압도적이라는 것이다(Friedberg 1998).

그러나 실제로 동아시아의 미래질서에 관한 구상은 일극적 패권구조, 다극적 세력균형, 다자적 공동안보 등 지극히 다양하다(Alagappa 2003: 72-78; Noordin 2004). ASEAN공동체와 동아시아공동체는 다자주의적 안보공동체를 통한 지역안보의 제도화를 추구한다. 안보공동체는 전쟁 이외의 수단을 통한 분쟁의 해결이 담보되는 공동체로서, 단일의 주권국가와 같은 ‘일원적’ 안보공동체와 다수의 주권국가로 구성되는 ‘다원적’ 안보공동체로 분류되며, 그 신뢰도, 정체성, 미래상 등의 발전수준에 따라 맹아, 성장, 성숙 등 세 단계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은 이미 상당한 성숙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반면, 동아시아는 아직 맹아와 성장의 중간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Adler et al. 1998; Hoang 2006). 따라서 동아시아의 미래는 단기적으로는 현실주의적 세력균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자유주의적 다자주의를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박사명 2006: 373-86).

그 점에 있어서 ASEAN 안보공동체는 UN헌장과 기타 국제법의 원칙을 준수하고, 내정불간섭, 만장일치에 의한 의사결정, 국민적·지역적 융화, 국가주권의 존중, 무력위협·사용의 포기, 분쟁과 갈등의 평화적 해결 등 원칙을 견지한다. 신뢰구축, 예방외교, 갈등해결 등에 있어서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평화자유중립지대(ZOPFAN, 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선언, 동남아비핵지대(SEANWFZ, Southeast Asia Nuclear Weapons-Free Zone)조약 등 기존 정치적 수단의 중심적 역할을 확인하고, ASEAN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을 지역안보의 중심적 대화공간으로 활용하며, 대량살상무기 등 전통적 안보위협과 국제테러, 마약밀수, 인신매매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ASEAN 2003).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당초 제안인 평화유지군 창설이나 인도주의적 개입은 내정불간섭 원칙의 침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수용되지 않는다(Sukma 2003). 2004년 ASEAN의 행동계획은 “포괄적 정치안보협력을 통한 지역의 평화, 안정, 민주주의, 번영의 증진”을 안보공동체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정치, 경제, 사회 등의 긴밀한 상호의존을 통한 종합안보와 협력안보를 그 전략으로 채택한다(ASEAN 2004: 6).

2006년 ASEAN헌장에 관한 EPG 보고서는 헌장의 기본원칙으로서 “민주적 가치와 선정(good governance)의 적극적 강화, 위헌적이고 비민주적인 정부교체의 거부, 인도주의적 국제법을 비롯한 법치주의, 인권,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통한 평화와 안정의 증진”을 제시한다. 비전통적이고 초국경적인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ASEAN의 공동이익이 더욱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는 경우 내정불간섭 원칙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시사된다(ASEAN 2006: 2-3, 16). 그러한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ASEAN의 대화상대에 대한 상호관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그 점에

있어서 인간안보의 증진, 특히 인권과 인도주의적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위한 ASEAN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요컨대 국제테러, 초국범죄, SARS, 지진해일, 조류독감 등 인간안보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있어서 다자주의적 지역협력이 필수적 조건임이 강조된다(ASEAN 2006: 11).

동남아의 안보협력에 관한 ASEAN의 진전은 동아시아 차원의 안보협력에도 반영되는바, 1999년 ‘ASEAN+3’의 동아시아협력선언은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에 필요한 상호이해 및 상호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지속적 대화, 조정, 협력과 초국경적 문제에 관한 긴밀한 협력을 강조한다(ASEAN 1999). 2001년 EAVG 보고서는 “대내적·대외적으로 무력충돌, 폭력, 적대행위로부터 자유로운 평화적이고 안정적이며 협력적인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상하고, 정치협력 및 안보협력의 증진이 냉전종식 이후 역내의 평화와 안보에 중요함을 강조한다. 영토분쟁, 해양분쟁, 국경문제, 자원경쟁, 초국범죄, 국제테러 등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를 포괄하는 인간안보에 대한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상호협력이 긴요하다는 것이다. 정치협력의 중심적 목적은 평화적 분쟁해결을 위한 역내 상호신뢰 및 공동연대의 증진에 있다. 따라서 국제법, 주권존중, 평화공존, 무력사용 포기, 상호평등 등의 원칙을 포함하는 행동규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신뢰구축, 갈등예방, 긴장관리 등 안보협력을 위한 효과적 기제로서 ARF의 강화가 촉구된다(EAVG 2001).

식민체제의 와해에 따라 냉전시대의 동남아에서 ‘상상적 공동체’의 국가화(nationalization)를 촉진하는 민족주의는 전통적 국가안보에 집착하는바, 냉전종식 이후 세계화(globalization)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안보, 종합안보, 협력안보 등 지역안보에 대한 시각의 전환은 ‘상상적 공동체’의 지역화(regionalization)를 추동한다. 동북아의 국지적 안보협력은 여전히 부진한 반면, 동아시아의 광역적 안보협력

을 촉진하는 ARF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공동체의 정치안보부문에 대한 구상에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ASEAN 안보공동체의 비전인바, 그 관건은 냉전시대의 유산으로서 여전히 전통적 군사안보에 집착하는 ‘안보국가(security state)’의 행방이다. 무엇보다 중국의 급속한 부상에 따라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중국과 일본의 일탈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다자주의적 안보협력은 모색하지 않으면서 대국주의적 세력균형의 지극히 가변적인 동향에만 동아시아의 운명을 위탁하는 것은 그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다자주의적 안보질서는 다양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평화, 번영, 진보”의 가능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Beeson 2007). 그러한 시도는 현실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는 ‘상상’이지, 그것을 철저히 외면하는 ‘망상’은 아닌 것이다.

V. 사회문화부문: ‘광장’의 진보

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정치적 지속가능성과 아울러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요구하는바, 그것이 바로 정치안보협력과 더불어 사회문화협력이 긴요한 배경이다. 지역통합에 긴요한 사회발전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유럽형 사회모델이 이상적 준거로 제시된다. EU는 “고용수준 및 사회보호의 증진”과 “생활조건 및 노동조건 의 향상”을 추구한다. 그러나 사실 단일의 유럽형 사회모델이 아니라 건강생명, 교육훈련, 노후연금, 실업급여, 사회보장 등 국가에 따라 다양한 사회정책이 존재하며, 그에 대한 EU의 권한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예컨대 효율성(노동시장)과 형평성(실업급여)이라는 두 기준에 따라 대체로 네 유형이 존재한다(Sapir 2005; Giddens 2006). 효율성도 낮고(경직된 노동시장) 형평성도 낮은(낮은 실업급여) 남부형,

효율성은 낮고(경직된 노동시장) 형평성이 높은(높은 실업급여) 대륙형, 효율성이 높고(유연한 노동시장) 형평성은 낮은(낮은 실업급여) 영미형, 효율성도 높고(유연한 노동시장) 형평성도 높은(높은 실업급여) 북구형 등이 그것이다.

ASEAN이 지향하는 공동체적 사회모델의 구체적 비전은 아직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회정책에 있어서 ASEAN공동체나 동아시아공동체가 지향하는 수준은 현실적으로 EU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성장지향적 관행, 유럽형 복지국가의 만성적 병폐, 사회보장에 우선하는 자가보장의 가족주의적 문화, 유럽보다 심각하게 낮은 수준의 경제발전 및 조세부담 등 자원동원의 다양한 제약을 고려하면, 시장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공정성과 형평성의 수준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에 관한 합의에 그칠 가능성이 다분하다. 실제로 ASEAN의 ‘비전 2020’에 관한 EPG 보고서는 경제위기의 교훈으로서 시민사회와 민중부문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빈곤계층에 대한 소비적이고 이전적인 사회정책보다는 그 능력개발에 주력하는 생산적이고 유인적인 사회정책을 부각한다(ASEAN 2000: 10).

인간안보에 관하여 ASEAN의 ‘비전 2020’은 환경오염, 마약밀수, 인신매매 등 초국경적 범죄에 대처하여 개인의 존엄과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지역협력의 강화를 촉구한다(ASEAN 1997). 그에 대한 2000년 EPG 보고서는 ASEAN의 궁극적 목표를 인간안보와 인간개발로 설정하고, ASEAN은 개인의 권리와 공공의 책임, 남녀평등, 종교적 관용, 종족적 융화, 빈곤의 감소와 공정한 분배, 고용과 훈련, 교육기회의 신장, 건강과 식량안보,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민중의 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 등을 통한 국민통합과 지역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ASEAN 2000: 13). 그것은 또한 동남아 각국의 다민족적, 다

문화적, 다종교적 현실을 고려하여 “10개의 문화, 1개의 ASEAN”을 표방하면서 “상부상조하는 사회들의 공동체”를 제안한다(ASEAN 2000: 11).

그와 유사한 맥락에서 2003년 제2차 발리협약은 ASEAN 사회문화 공동체의 목표로서 “상부상조하는 사회들의 공동체”를 선언하고, 빈곤계층과 농촌주민의 생활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발전을 도모함에 있어서 긴밀한 지역협력과 여성, 아동, 소수민족 등 소외집단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한다. 교육훈련, 과학기술, 고용증대, 사회보장 등 인간개발을 위한 투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경제성장의 효율성과 아울러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빈곤, 건강, 질병, 환경, 실업 등 인간안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된다(ASEAN 2003). 2004년 ASEAN의 행동계획에 의하면, 사회문화공동체의 목적은 “민중중심적 ASEAN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인간적, 문화적, 자연적 자원의 축적”이며, 그를 위한 전략은 효과적인 사회보장, 환경과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경제통합의 부정적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지역협력 등이다(ASEAN 2004: 16).

사회문화공동체에 대한 ASEAN 구상의 발전에 따라 사회문화부문에 대한 동아시아 차원의 지역협력 구상도 진전한다. 1999년 동아시아 협력선언은 동아시아의 지속적 성장에 필요한 역내 경제적·사회적 격차의 완화를 위한 사회발전 및 인간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ASEAN 인적자원개발구상 및 사회안전망행동계획의 실행을 위한 지역협력의 확대를 촉구한다(ASEAN 1999). 2001년 EAVG 보고서는 빈곤, 문맹, 질병 등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사회정의와 인간안보의 가치를 부각한다. 가속적 성장이 초래한 심각한 소득격차, 도시집중, 사회해체, 전통파괴 등은 동아시아 공동번영의 기초로서 균등하고 공정한 사회와 계몽되고 강력한 시민을 요구한다. 따라서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을 위한 ASEAN의 행동계획에 대하여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동아시아적 모델로서의 가치가 평가되고, 사회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국가기구와 시민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강조된다(ASEAN 2001).

그러나 최근 사회문화부문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경제발전에 대한 경시를 초래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바, “사회문화부문으로 확대·심화되는 ‘ASEAN+3’ 협력이 금융통화부문에서 이루어진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성과를 손상할 가능성”이 지적되는 것이다(ASEAN 2007). 그러나 동남아 및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경제금융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더라도, 그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정치안보부문 및 사회문화부문의 포괄적 지역협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소극적 차원에서 각종 전통적·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간안보와 적극적 차원에서 가속적 성장을 넘어 지속적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인간개발이 ASEAN 공동체와 동아시아공동체의 궁극적 목적으로 제시되는 배경이다. 그것이 바로 1990년대 중반 동남아에서 동북아까지 동아시아 전역을 난타한 파국적 경제위기의 교훈인 것이다.

동아시아의 문화적 다양성에 비추어 ASEAN공동체와 동아시아공동체는 모두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표방한다. 다양한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일원주의적 동화(assimilation)가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다원주의적 통합(integration)이 강조되는 것이다(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2006).⁵⁾ 경제공동체와 안보공동체의 부상 이전에 이미 역사적 사회문화공동체인 유럽과는 대조적으로 다양한 부문의 공동체 건설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동남아와 동아시아에서 사회문화부문은 경제금융부문 및 정치안보부문에

5) 유교, 불교, 개신교, 천주교, 토착종교, 샤머니즘 등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다양한 종교문화의 하나”로 평가되는 한국의 역동적 다종교문화는 동아시아의 문화적 통합에 관한 비교적 합리적인 모델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Buswell 2006).

비하여 현저하게 정체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가 부진하면 후자는 물론 진정한 ASEAN공동체나 동아시아공동체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다(Severino 2006: 342-71). 요컨대 사회문화부문에 관한 ASEAN공동체와 동아시아공동체의 규범적 비전은 물질적 현실에 집착하는 국가주의를 넘어서 인본주의를 동아시아의 새로운 관념적 현실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병리적 ‘망상’이 아닌 합리적 ‘상상’으로 평가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VI. 결론

동남아 및 동아시아 각국의 민족주의와 그 정치적 표현인 국가주의가 동남아와 동아시아의 지역주의에도 거의 전면적으로 투사되고 있다. EU에 현저히 미달하는 수준의 지역통합에 대한 선호는 동남아와 동아시아의 지역주의가 지극히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망상’이 아니라 상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상상’임을 반증한다. 동남아와 동아시아의 지역주의를 제약하는 다양한 현실적 장애는 바로 파괴적 ‘망상’의 증거가 아니라 창조적 ‘상상’의 계기인 것이다. ‘상상적 민족공동체’에 기초하는 적자생존의 발전주의적 경쟁을 넘어 ‘상상적 지역공동체’를 지향하는 상호의존의 공동체적 연대를 모색하는 것은 세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화의 객관적 요청이다. 인간안보와 인간개발을 장기적 목표로 설정하는 동남아와 동아시아의 지역주의적 ‘상상’은 바로 UN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이상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세계적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의 유기적 조화로 평가될 수 있다.

ASEAN의 경제금융, 정치안보, 사회문화 등 세 부문에 대한 공동체

적 기획이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도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다. 지역 협력과 지역통합에 관한 ASEAN의 창조적으로 구상된 비전과 장기적으로 축적된 경험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지역질서를 위한 대안으로 부상한 동아시아공동체의 진전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동북아 각국의 역사적 갈등이나 현실적 경쟁으로 인하여 동북아의 국지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질서에 대한 전망이 근본적으로 모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대륙적 정체성과 일본의 해양적 정체성이 모두 지리적 범주로서의 동북아를 철저히 이탈하고 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지역질서에 대한 동남아의 주도적 역할은 적어도 질서형성의 초기단계에서는 규범적으로 지극히 타당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蘇浩 2003; 曹雲華·唐獅 2005; 秦亞青·魏玲 2007; Ito 2007). ASEAN의 다양한 물질적·관념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각국이 그 이상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미비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경우, 동남아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현실주의적 비판은 그 타당성과 가능성이 모두 약화될 수밖에 없다.

ASEAN공동체는 전략적으로도 이미 동아시아공동체의 핵심적 '고리'이며 '지레'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에 있어서 발전주의적 경쟁을 넘어 공동체적 연대를 모색하는 과제는 바로 ASEAN공동체의 진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에 대한 객관적 수요증가에 부응하는 동북아의 주체적 공급능력은 동남아의 주도적 '촉매' 역할을 통해서만 가동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그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의 역사적 주변부인 동아시아의 경우, 국가주권을 신중하게 배려하는 지역주의는 창조적 '상상'의 범주에 속하는 반면 국가주권을 성급하게 배제하는 지역주의는 파괴적 '망상'의 범주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국가주의적 현실을 지

나치게 과장함으로써 지역주의적 ‘상상’을 ‘망상’으로 규정하는 시각은 냉전종식 이후의 새로운 역동적 현실을 간과하는 주관적 현실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모태인 동남아 지역주의의 비전은 내부적으로도 여전히 ‘유토피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ASEAN 2000). 그러나 “전쟁과 빈곤은 이 지역의 민중에 있어서 두 최대의 악몽이었다고 할 수 있다. ... 이 지역을 전장에서 시장으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모두 인간성이 충일하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은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성과의 하나일 것이다”(Diokno et al. 2006: 14). 그 지역은 바로 20세기 후반 냉전의 비극을 가장 극단적인 양상으로 체현한 동남아의 메콩(Mekong) 유역으로서, 동아시아 전역의 냉전에 대한 역사적 경험을 대변한다. 따라서 ‘전장에서 시장으로’의 전환은 그 자체만으로도 획기적인 진보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의 경제위기는 동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적자생존의 ‘시장’을 넘어서 상호의존의 ‘광장’이 긴요함을 시사한다. 그것이 바로 ‘인간성이 충일하는 공간’으로서 과거의 비극에 대한 ‘기억’이 미래의 희망을 위한 ‘기획’으로 승화하는 공동체적 연대의 현장이다.

주제어: ASEAN공동체, 동아시아공동체, 안보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

참고문헌

- 동북아시아위원회. 2006. 『참여정부의 동북아시아 구상』 .
-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2006. “동아시아 협력 및 동아시아공동체: 평가와 과제.” 2006년도 외교통상부 연구용역 보고서.
- 박사명. 2006. 『동아시아의 새로운 모색』 서울: 이매진.
- 배궁찬. 2007. “ASEAN의 공동체 구상과 헌장 채택 전망.” 동아시아 공동체연구회 발표논문. 외교통상부 회의실, 4월 20일.
- 이승철 외. 2005.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과 전망』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이창재. 2005.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전망과 추진방안.” 이승철 외.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과 전망』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Adler, Emanuel and Michael Barnett(eds.). 1998. *Security Communi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lagappa, Muthiah(ed.). 2003. *Asian Security Orde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Anderson, Benedict. 1991. *Imagined Communities*. London: Verso.
-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1997. "Vision 2020."
- _____. 1999. "Joint Statement on East Asia Cooperation."
- _____. 2000. "Report of the ASEAN Eminent Persons Group on Vision 2020."
- _____. 2003. "Declaration of ASEAN Concord II (Bali Concord II)."
- _____. 2004. "Vientiane Action Programme (2004-2010)."
- _____. 2006. "Report of the Eminent Persons Group on the ASEAN Charter."
- _____. 2007. "Chairman's Statement on the 10th ASEAN Plus Three Summit."

- Beeson, Mark. 2003. "ASEAN Plus Three and the Rise of Reactionary Regionalism." *Contemporary Southeast Asia* 25(2).
- _____. 2007. *Regionalism and Globalization in East Asia*. New York: Palgrave.
- Bello, Walden. 2002. "Strategic Cooperation or Marginalization?" *Philippine Daily Inquirer*, February 20.
- Buswell Jr., Robert E.(ed.). 2006. *Religions of Korea in Practi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EAC(Council on East Asian Community). 2005. "The State of the Concept of an East Asian Community and Japan's Strategic Response Thereto." Tokyo, Japan.
- CHS(Commission on Human Security). 2003. *Human Security Now*. New York: CHS.
- Diehl, Paul F. 2006. "Can Asia Be Like Europe?" In Lee et al.(eds.), pp. 33-57.
- Diokno, Maria Serena I. and Nguyen Van Chinh(eds.). 2006. *The Mekong Arranged & Rearranged*. Chiangmai, Thailand: Mekong Press.
- EAVG(East Asia Vision Group). 2001. "Towards an East Asian Community."
- EASG(East Asia Study Group). 2002. "Final Report."
- Emmerson, Donald K. 2005. "Security, Community, and Democracy in Southeast Asia."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6(2).
- Friedberg, Aaron L. 1998. "Europe's Past, Asia's Future?" SAIS Policy Forum Series Report No. 3(October).
- Giddens, Anthony. 2006. "European Social Model"
(<http://www.policy-network.net>).
- Haas, Ernest. 1976. "Turbulent Fields and the Theory of Regional Integr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30(Spring).
- Han, Sung-Joo. 2001. "The East Asian Community." Sasakawa Peace

Foundation USA

(<http://www.spfusa.org/Program/av2001/jan3002.pdf>).

Hoang Anh Tuan. 2006. "Security Issues." In Lee et al.(eds.), pp. 111-24.

Ito Kenichi. 2007. "State of East Asian Community Concept and ASEAN Integration." *GFJ Commentary*, February 21.

Jones, David Martin and M.L.R. Smith. 2006. *ASEAN and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Cheltenham, UK: Edward Elgar.

_____. 2007. "Constructing Communities: The Curious Case of East Asian Regionalism."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33.

Lee Poh Ping, Tham Siew Yean and George T. Yu(eds.). 2006. *The Emerging East Asian Community*. Bangi, Malaysia: Penerbit Universiti Kebangsaan Malaysia.

Lincoln, Edward J. 2004. *East Asian Economic Regionalism*.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Low, Linda. 2000.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 Trading Arrangements in the Context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in Asia"
(<http://www.bschool.nus.edu.sg/Research/files/0038.pdf>).

Moravcsik, Andrew. 1998. *The Choice for Europ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Moeller, Joergen Oerstroem. 2006. "European Experience of Regional Integration."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Singapore, May 3.

Munakata, Naoka. 2006. *Transforming East Asia*.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NEAT(Network of East Asian Think-Tanks). 2006. "Policy Recommendations on Strengthening the Pillars of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Kuala Lumpur, Malaysia, August 21-23.

- Noordin Sopiee. 2004. "The Making of an East Asian Community: Strategic Challenges, Strategic Responses." Paper Presented to AT10 Research Conference, Tokyo, Japan, February 3-4.
- Parsons, Craig. 2002. "Showing Ideas as Caus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56(1).
- Ramos, Fidel V. 2006. "U.S.-China and East Asia Relation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Issues & Insights* 9(6).
- Roland-Holst, David. 2003. "Global Supply Networks and Multilateral Trade Linkages: A Structural Analysis of East Asia." ADB Institute Discussion Paper Series.
- Rozman, Gilbert. 2004. *Northeast Asia's Stunted Region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ggie, John G.(ed.) 1993. *Multilateralism Matter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apir, Andre. 2005. "Globalization and the Reform of European Social Models" (<http://www.bruegel.org>).
- Severino, Rodolf C. 2006. *Southeast Asia in Search of ASEAN Community*.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Sukma, Rizal. 2003. "The Future of ASEAN: Towards a Security Community." Paper Presented at a Seminar on ASEAN Cooperation. New York, June 3.
-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1990. *Human Development Report 199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4.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ang Gung Wu. 2006. "Reflections on East Asian Community." In Lee et al.(eds.), pp. 58-70.

- Wendt, Alexander. 1999.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ener, Antje and Thomas Diez(eds.). 2004. *European Integration 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oo-Cumings, Meredith(ed.). 1999. *The Developmental Stat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Yun, Chunji. 2005. *Japan and East Asian Integration*. Münster: LIT Verlag.
- 陸建人. 2006. “論亞洲經濟一體化.” 『當代亞太』 5.
- 蘇浩. 2003. 『從啞鈴到橄欖: 亞太合作安全研究』.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 曹雲華·唐獅. 2005. 『新中國-東盟關係論』.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 秦亞青·魏玲. 2007. “結構、進程與權力的社會化” 『世界經濟與政治』 3.
- 郭樹勇. 2006. “論區域共識的制度化道路.” 『世界經濟與政治』 5.
- 龐中英. 2004. 『中國與亞洲』 上海: 上海社會科學出版社.

Abstract

From the Marketplace to the Public Space: Beyond Developmental Competition in East Asia

Park Sa-Myu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extent to which the visions of the ASEAN Community are reflected in the visions of an East Asian community for "peace, prosperity and progress." Contrary to the criticism that an East Asian community is an entirely unrealistic and deceptive 'delusion', it is a project of realistic and constructive 'imagination' in that it reasonably takes into account the profound aspirations of East Asian nations for sovereignty because of their historical experience of colonial domination. National sovereignty is neither omnipresent nor omnipotent in East Asia, nonetheless. The East Asian visions of regional solidarity in economic, security, and socio-cultural fields reflects the visions of the ASEAN Community, which are consistent with universal value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such as human security and human development. In this regard the economic crisis of the late 1990s provided a crucial impetus to enlightened regional coop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eyond blind national competition for accelerated growth. The ASEAN community will serve an East Asian community as the central strategic link, since it offers more credible visions and more reliable experiences than its Northeast Asian counterpart.

Key Words: ASEAN Community, East Asian Community, Security Community, Economic Community, Socio-Cultural Community